

제63회 국정과제회의자료

2005. 7. 20(수)

##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목 차 ••••

I.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1
II. 행정정보 공유 현황 .....	2
III. 행정정보 공유 문제점 .....	8
IV.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	11
V. 향후 추진계획 .....	23
◇ 쟁점 및 토의사항 .....	24

참고1. 행정정보 공유관련 부처별 의견

참고2. 행정정보 공유대상 주요정보

참고3. 주민등록증명 운영제도 개선방안

참고4. 문서대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I.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 업무혁신의 기반이 되는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혁신을 통해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시키고자 함

### ◆ 대통령님께서서 정보공유 개선방안 검토 지시('05.1.12)

- 전자정부 목표 중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통합·연계
- 부처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공유문제는 정보보호 측면과 기술적인 저항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검토

### ◆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수립

- 혁신위, 행자부, 전산원, DB전문가 합동 TF 구성('05. 1)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DB 공유현황 조사('05.2 ~ 3)
-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05. 3)

### ◆ 전자정부전문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검토·조정('05. 3 ~ 4)
- 전자정부전문위 및 관계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05. 4. 9)
- 행정DB 보유부처 및 정보수요기관 합동회의('05. 4. 15)

### ◆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05.6.23)

## II. 행정정보 공유 현황

### 1

### 행정정보 공유 추진경위

#### □ 행정정보화 추진

- '87 ~ '90 : 국가 주요 기본DB 구축을 위한 행정망사업 추진
- '91 ~ '97 : 주민등록 등 단위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24종)
- '98 ~ '00 :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 '01 ~ '05 : 물류, 조달 등 서비스별 통합시스템 구축 중

#### □ 정보공유 제도개선

- '86. 5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인프라 구축 착수
- '94. 1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 행정기관에서 생성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 '95. 8 :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제공 및 유통기반 확대 추진
- '98. 3 :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정보 공동이용 절차 규정
- '01. 6 :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절차를 법률로 규정

## 2

## 행정정보 및 DB화 현황

### □ 행정정보 종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 원부 등의 행정정보는 총 4,583종(중앙 771, 지방 3,812)
- 이중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및 민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74종 1,065백만 건

분야별	정보종수	정보건수
• 주민등록, 호적 등 인적 정보	14종	302백만 건
• 토지, 건축, 자동차 등 물적 정보	14종	152백만 건
• 국세, 조달 등 업무용 정보	46종	611백만 건

※ 정보 건수 :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등 공부 1매를 1건으로 산정

### □ 행정정보 DB화 현황

- 주요 정보 74종중 65종 1,049백만 건(98%)의 DB가 구축·활용되고 있어 DB 구축 사업은 마무리 단계
  - 미 구축된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9종(16백만 건)의 DB도 현재 자료정비 중에 있어 금년 중에는 활용이 가능
- 다만,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정책정보는 대부분 종이나 개인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 DB화 시급

### 3

## 행정정보 공유 현황

### □ 행정DB 공유 현황

- 주요DB 74종을 중심으로 연간 1,639백만 건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행정DB의 정보공유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음
  - 행정DB는 주로 민원과 조세 등 대량의 업무처리에 활용
  - 행정기관이 62%를 차지, 공공 및 민간기관도 점차 증가 추세

기관별	공유 DB 종수	공유정보건수(연간)
계	74종	1,639백만건
행정기관(중앙,지자체)	51종	1,025백만건(62.5%)
공공기관(국민연금등)	22종	493백만건(30%)
민간기관(금융기관등)	17종	121백만건(7.5%)

- 범정부적으로 온-라인 공유가 필요한 핵심 정보는 주민등록 등 36종이나 이중 16종만 실시간으로 공유 중

대상정보	공유				비공유
	비실시간	실시간		계	
		업무시간	24시간		
36종	3종 (9%)	4종 (11%)	12종 (33%)	19종 (53%)	17종 (47%)

- 또한, 주요통계 등 정책정보는 DB화 등 정보공유에 대한 준비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음

## 행정DB 주요 정보공유 사례

### 주민등록정보      연간 862백만 건 공유

- 주민등록정보의 경우 63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여권발급 등 110개 업무에 연간 862백만 건 공동 활용

### 여권발급업무      연간 350만 건의 증명서 감축

- 여권발급 시 필요한 주민등록, 병역사항, 운전면허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활용, 주민등록초본 등 연간 350만 건 증명서 감축

### 사회복지업무      14종 17백만건의 첨부서류 폐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업무의 경우 행자부, 국세청, 4대 보험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 재산 관련 14종 정보 공동 활용

### 4대 보험      연간 82백만건의 증명서 감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경우 10개 기관 53종 행정정보 활용, 연간 82백만건 증명서 감축

###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 연간 4조 6,390억원

-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국민 및 행정비용 절감 : 4조 2,375억원
- 행정기관 정보 확인처리를 위한 인건비 절감 : 4,015억원

## □ 정보공유 시스템 현황

-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은 약 48종이며, 대부분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 중

유형별 (비율)	정보공유 방법	관련 시스템
업무 연계형 (4%)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시도, 시군구에서 업무와 DB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운영	시군구 및 시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DB 제공형 (49%)	기관 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청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	호적정보, 주민정보, 등기정보, 조세정보 시스템 등
DB 검색형 (35%)	필요한 정보를 DB를 직접 연계하여 검색 활용	여권발급, 국세통합정보, 국토정보센터,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등
DB 중계형 (12%)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중계센터에서 검색하여 정보수요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생산적복지정보시스템, 4대보험정보시스템 등
DB 통합형 (0%)	공동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	없음



## □ 정보공유 제도 현황

###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법률로 규정
  - 행정기관 간 보유·수집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의무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기관 구비서류 감축 권장
  - 민원처리 시 행정정보 열람으로 구비서류 같음
  - 행정내부업무는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

### ◆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

- 행정정보의 이용절차를 개별법에서 규정하여 심사·제공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행정정보를 이용 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서 정보 보유기관장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
- 정보이용기관은 당초 목적 외 정보사용 및 제공 금지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개인정보 공유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보유목적 외 이용 금지
  - 예외적으로 이용·제공하고자 할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정보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사항을 법률로 규정

### Ⅲ. 행정정보 공유 문제점

#### □ 정보공유 수요 대처 미흡

- 행정기관 간 다양한 정보공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민원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를 요구 중

기 관 별	요구정보	요구기관수	요구정보건수 (연간)
계	74종	668개	260백만건
행정기관		97개	85백만건
공공기관		571개	176백만건

※ 자료출처 : '0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요조사결과(행자부)

- 또한, 기관간 정보 공유와는 별도로 매년 443백만 건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어 체계적인 감축대책 필요

구 분	연간 발급건수	주요 발급 증명
계	443백만건	40종
인적증명	222백만건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
부동산증명	190백만건	토지, 등기, 부동산 등
자동차증명	26백만건	자동차등록, 이륜자동차신고 등
기타 증명	5백만건	입찰, 건설업, 사업자등록 등

## □ 정보공유 추진체계 정비 필요

- 정보공유의 체계적 관리, 지속적인 평가, 행정DB 공유를 위한 기준과 표준 제정 등을 관장할 강력한 추진체계 미흡
- 공동 활용이 필요한 주요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면서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센터기능 부재

## □ 핵심정보의 온-라인 공유 미흡

- 민원 및 업무처리에 핵심이 되는 주민등록 등 36종의 정보 중 16종(44%)만 실시간으로 공유
  - 24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B는 12종(33%)에 불과
- 또한, 제도 및 시스템이 민원사무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 행정업무 및 정책 수립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음

## □ 제도적인 제한

- 행정정보 공유 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행정정보의 제공권한 및 심사기능이 대부분 정보보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정부적 정보공유에 한계

## □ 정보 통합 · 연계에 대한 저항

-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가 집중될 경우 정보의 오·남용과 개인정보의 침해우려가 높아질 것을 우려
- 대부분 행정정보를 소유개념으로 관리하고, 기관별·담당자별 특성에 따라 정보공유가 좌우되는 등 부처간 벽이 높음

정보제공 제한사유	부처간 비협조	DB 표준화 문제	법제도적 제한	기술적 연계 문제	절차 및 지침 미흡
비율	28%	26%	19%	16%	11%

※ 자료출처 : '04. 4 범정부적 전산환경 설문조사 결과(행자부)

⇒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정보공유 확대는 찬성하나 민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대(부처별 의견 : 참고 1)

## □ 기타 문제

- 은행 · 기업 · 개인 등 민간의 정보제공(민원서류)이 필요하나 관련 대책이 없어 종이 증명서류 여전히 유통
- 정책정보에 대한 분류체계 및 보관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련 DB가 없고, 고급정보 제공 기피로 정보축적도 곤란
- 동일한 문서대장을 종이와 전자적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어 자료 정합성(整合性)문제와 인적 · 재정적 낭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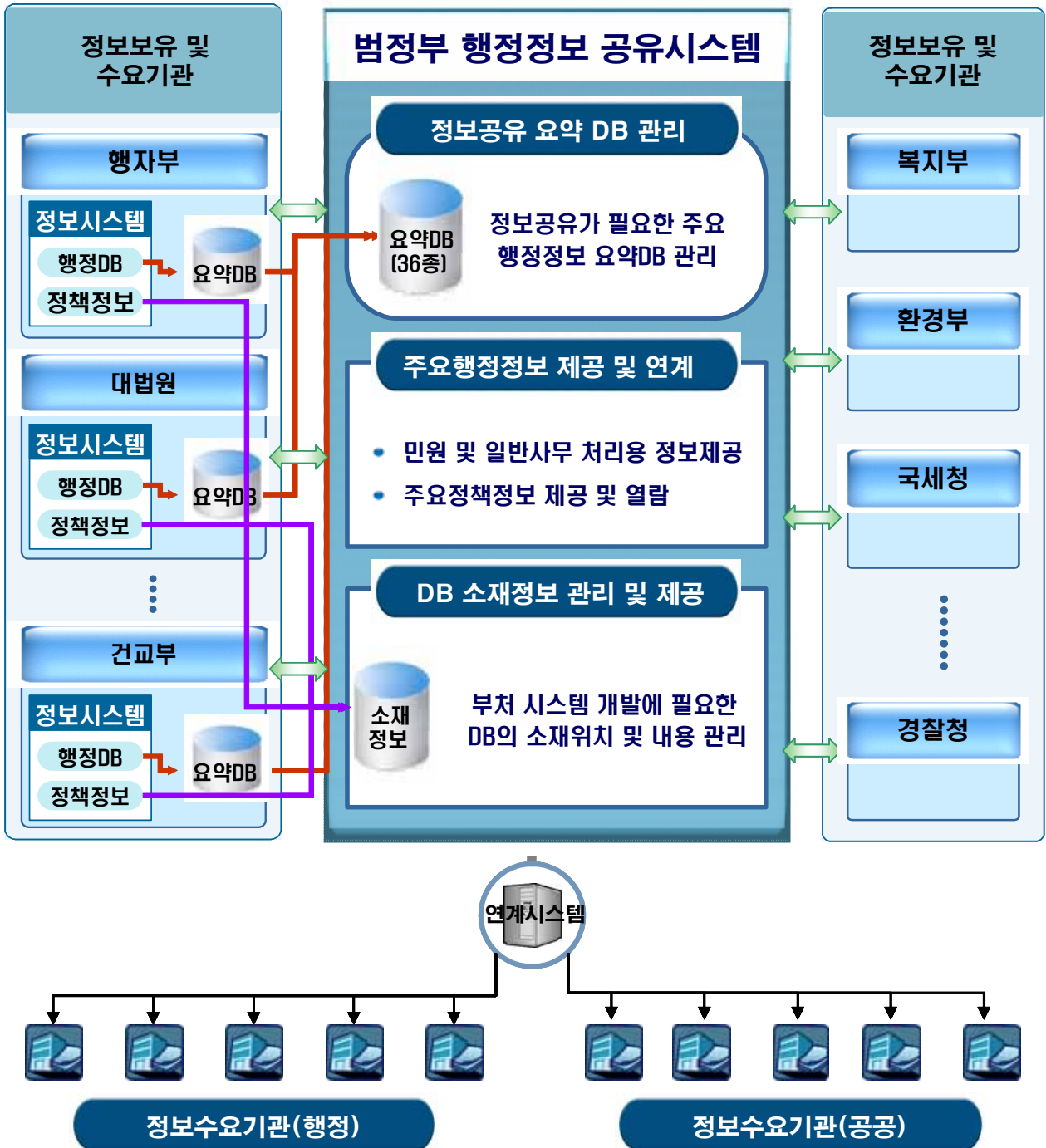
※ 주민등록표 공부의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 162억 소요(인건비 미포함)

## IV.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 ◇ 참여정부 내 주요행정DB를 통합·연계하고, 관련 제도를 개혁하여 국가 행정정보공유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현 행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별 공유시스템 운영</li> <li>◆기관별·업무별 DB 보유</li> <li>◆주민등록정보 공유 제한</li> <li>◆문서대장 이중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 정보공유시스템 운영</li> <li>◆주요행정DB 통합·연계</li> <li>◆주민등록정보 공유 확대</li> <li>◆문서대장 일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정보 공유체계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 정책정보시스템 구축</li> </ul>

□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개념도



## □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전략

### ◆ 범정부 정보공유 센터 설치

- 정보공유 전략수립, 제도개선 등 정보공유 센터 기능 수행
- 범정부 정보공유 기술·기반 제공 및 표준화 추진
- 공동 활용이 필요한 주요 정보 선정 및 연계방안 수립

### ◆ 주요 행정정보 요약 DB 구축

- 주요 행정·민원정보의 요약DB 구축 및 연계
- 범정부 정책정보 DB 및 열람시스템 구축·관리
- 정보시스템 개발 및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소재정보 관리

### ◆ 정보공유 기능 통합 수행

- 부처 합동의 「행정정보공유 심의위원회」 운영
  - 행정정보공유센터의 행정정보 연계·제공 심의기능 수행
  - 위원회는 정보보유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 필요한 정보는 '범정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일괄 제공
  - 민원처리용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량의 행정업무처리용 정보와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 2

## 주요 행정DB의 단계별 통합·연계

### □ 1단계 : 주요 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 업무 및 민원처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주요 핵심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36종)
  - 주요 정보별로 정보공유수요가 많은 항목을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약DB 등 환경 구축
    - ※ 행정정보 공유대상 주요정보 : 참고 2
  - 주요 정보별 요약DB를 연계하여 범정부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 행정 및 민원처리,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요약DB를 이용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및 시스템 연계

### □ 2단계 : 주요 행정DB의 단계별 통합 추진

- 범정부적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한 주요DB(36종) 중심으로 요약DB의 통합을 추진하되, BPR/ISP를 통해 방향 수립
  - 정보의 속성은 다르나 정보의 주체가 같은 DB는 하나의 DB로 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업무혁신 추진(장기과제)
    - (예시) · 인적 DB : 주민등록 + 호적 + 제적 + 인감 등
    - 건축 DB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 + 건축도면 등
    - 토지 DB : 토지 + 지적 + 토지등기 + 지적도 등
- ※ 주체별 DB 통합은 기관간 기능·업무의 통합과 관련이 있어 저항이 우려되므로 우선 BPR/ISP를 추진하여 방향 설정



### 3

## 주민등록정보 공유체계 확대

- ◇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증명을 대상으로 감축방안을 수립·시행 후 타 증명 확대(개선방안 : 참고 3)

### □ 행정기관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여 '06년까지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증명 징구 폐지
- 이를 위해 시스템 보강 및 인·허가 등 주민등록등·초본을 증빙서류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06년까지 개정

### □ 공공기관

- 국민생활과 직결된 학교, 연금, 보험 등 대규모 공공기관에도 주민등록자료를 제공, '07년까지 주민등록증명 징구 관행 폐지
- 다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금년에 전자정부법등을 개정 제공

### □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으나 전체 주민등록등·초본 중 37%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 필요
- 대출, 채권추심 등 대량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받고 있는 업무에 한해 온라인 신청·심사 후 정보를 제공

## 4

## 문서대장 일원화

- ◇ 전자화가 안 된 문서대장은 '07년까지 전자화 마무리
- ◇ 전자화 된 문서대장(10억 건)은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 '07년까지 전자대장으로 일원화(문서대장 정비방안 : 참고 4)

### □ 문서대장 전자화

- 전자화가 안 된 문서대장(289종) 중 전자화가 필요한 123종은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여 '07년까지 완료
  - '05년 33종(2만건), '06년 55종(15만건), '07년 35종(25만건)

### □ 문서대장 일원화

- 전자화가 완료되었으나 종이원장 또는 출력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대장은 '07년까지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 '05년까지 : 주민등록표 등 140종 235백만건(기완료 640백만건)
  - '07년까지 : 농지원부, 하천대장 등 51종 125백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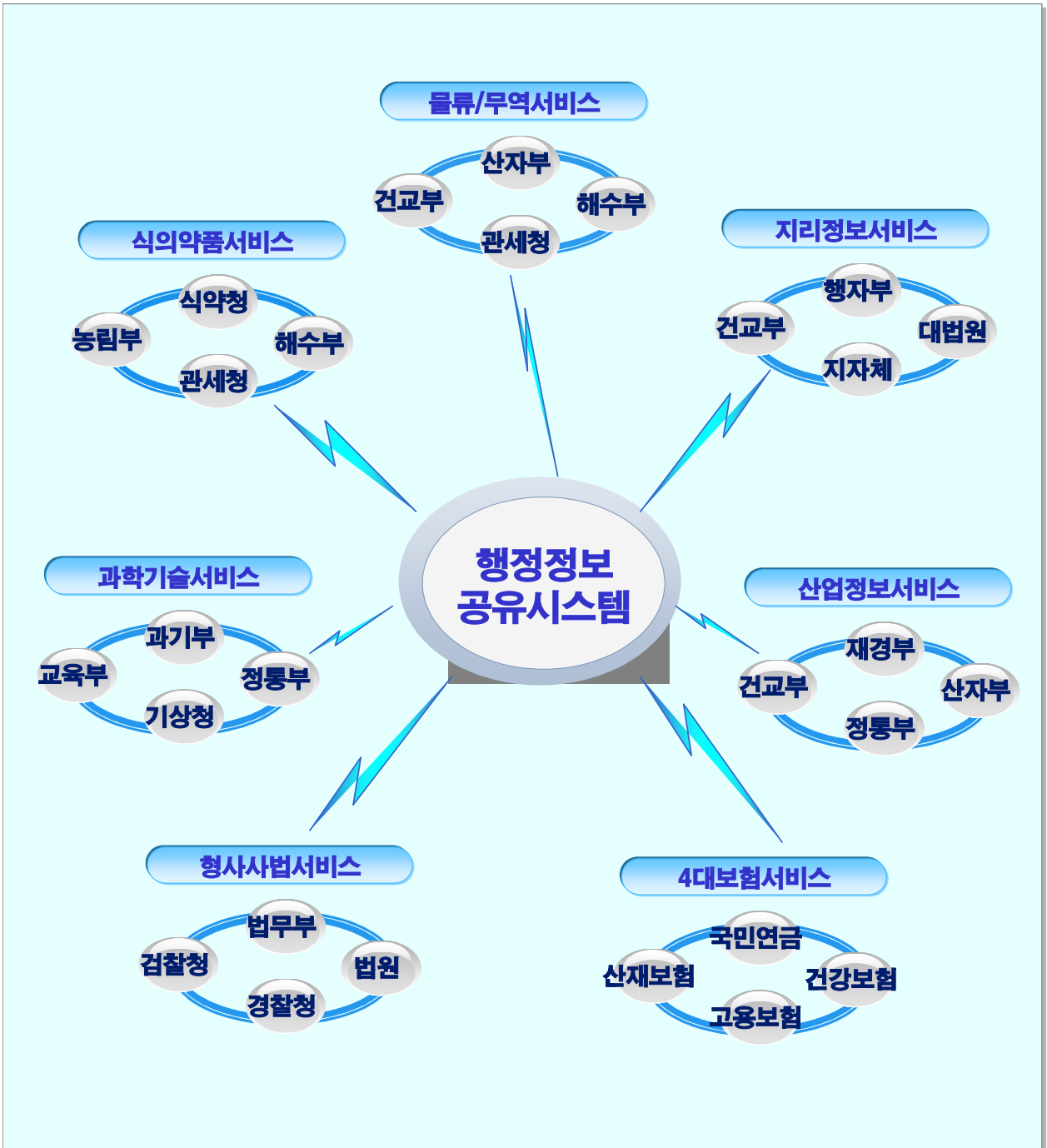
### □ 제도개선 및 시스템 보완

- 국가기록물관리법상 영구보존문서의 종이문서 보존규정을 전자원장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
  - 종이대장을 보관하도록 규정된 법령, 지침, 매뉴얼 등 정비
- 문서대장일원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은 '06년까지 완료

5

주제별·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연계

주제별/서비스별 시스템 연계 개념도



- 부처별로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나 연관성이 높은 업무는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및 DB를 통합·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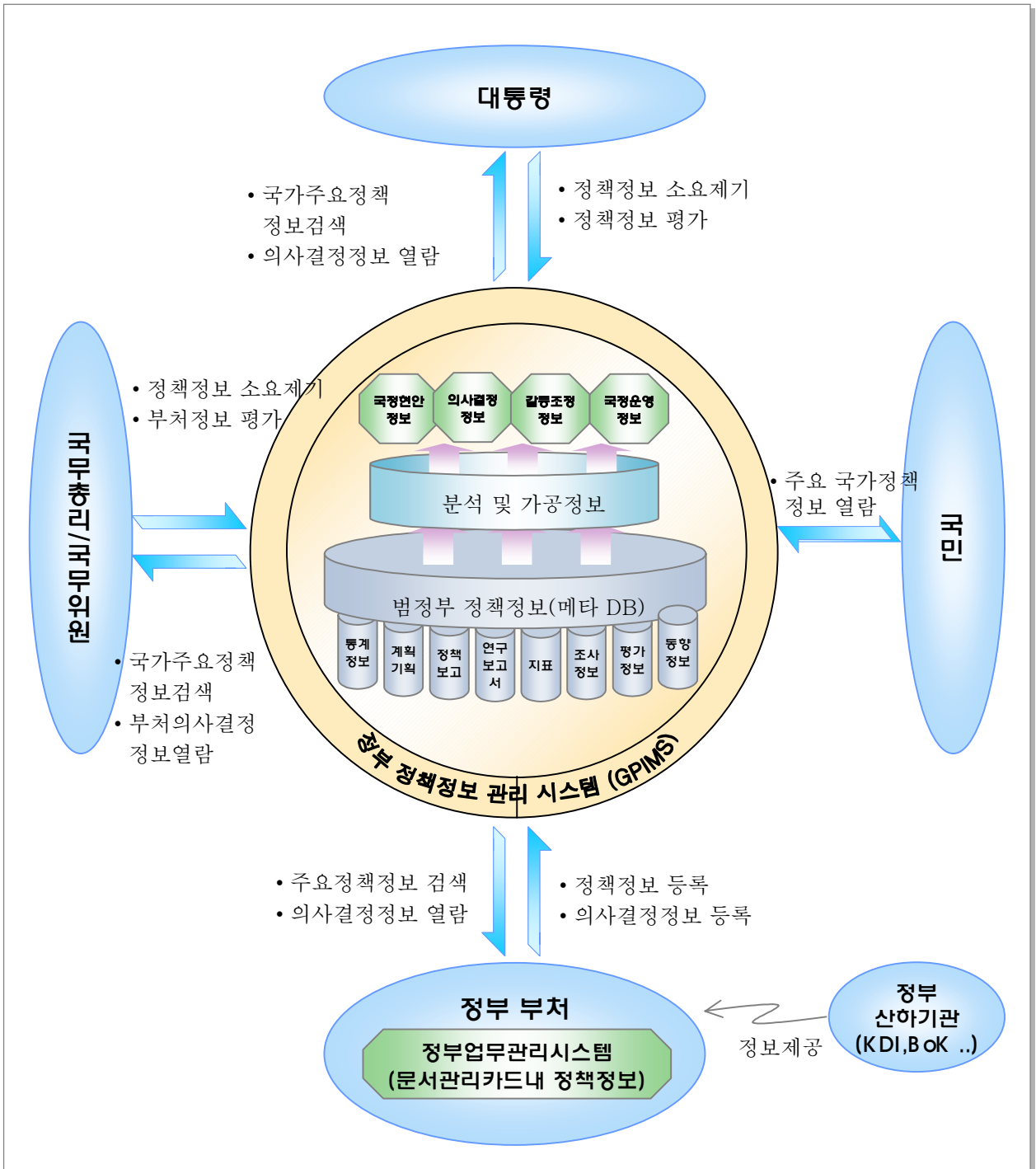
주제·서비스별	연계·통합 업무 및 DB
물류/무역	화물정보, 보세운송, 화물하역, 입출항·운송·통관정보 등
지리정보	수치지형도, 전자해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 도로망도 등
식의약품	식품, 농·수산물 등 가공·유통·상품·배송·위해정보
과학기술	연구과제/인력, 학술정보, 과학기술 통계 및 분석정보 등
기업	기초정보(사업자등록, 업체명, 주소), 재무정보 등
산업	산업DB, 기업지원DB(창업, 입지, 물류 등)
형사사법	수사기록, 공판기록, 집행기록, 출입국정보 등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보
산업인력	고용정보, 직업훈련 및 자격정보, 산업재해정보, 업체정보 등
환경	자연생태계, 환경시설,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 해양자원 등
재정	예산편성, 세입세출정보, 자금정보, 감사정보 등

- 시도 및 시군구와 같이 종합행정 기능이 있는 경우 기관별 통합DB를 구축하여 운영
  - 시군구 : 주민, 복지, 환경 등 20개 분야 구축 완료
  - 시도 : 보건위생, 환경, 수산, 건축주택 등 24개 분야 추진 중

# 6

# 법정부 정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법정부 정책정보 공유시스템 개념도



## □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 범정부적으로 고급 정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 부처의 주요 정책정보를 보관·관리하면서 공무원이 주제별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책정보 통합시스템 도입
  -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 기능과 연계하여 정책정보를 생성한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
- 정책정보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대상자 및 범위를 지정
  - 고위 정책결정권자는 정제된 정책정보를 열람
  - 일반적인 정책정보는 열람권한에 따라 주제별로 열람
    - ※ 기업 및 일반국민에게도 공개 가능한 정책정보는 제공
- 금년에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BPR/ISP를 통해 정책정보 분류 및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센터는 메타(Meta) 데이터를 관리하고 부처는 세부정보 관리
    - ※ 행자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추진 팀과 연계 추진

## □ 정책정보 품질제고 방안

- 전자정부법 개정시 행정기관 정책정보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
- 총리실 또는 정부혁신위 등에서 「정책정보 품질평가기능」을 수행하여 부처별 정책정보 등록 및 관리상황을 수시 평가
- VIP 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간부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보고는 「정책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

## ※ 수집대상 정책정보(예시)

구 분		종 류	
정책 과정 정보	정책일반 정보	행정기관업무의 기반이 되는 일반정보	연구보고서, 국내외 도서, 논문, 각종사료 등
	정책전문 정보	행정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문자료 (통계, 가공정보 등)
	동향정보	정책과정에 생성된 각종 동향정보	정책정보, 동향정보, 의사결정정보 등
정책 결과 정보	정책정보	수립된 각종정책에 대한 정보	각종 정책(부서별/주제별/ 각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집행결과 정보	정책실행 완료단계의 현황 정보	백서, 보고서, 산출물 등
	평가결과 정보	평가 및 감사 정보	성과평가, 감사, 국정감사자료 등
외부 정보	인적정보	외부 인적자원 정보	전문분야, 분야별 업무이력, 특기, 관심분야 등
	여론정보	고객만족 정보 등	여론, 만족도조사 자료 등
	행정환경 정보	사회/경제적 동향 등	경제·물가지표 등 사회추세, 이익집단, 국민·시민정보 등

## 7

## 정보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 기본방향

-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공유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정보공유 의무 규정 명시

## ◆ 개선방안

개정대상		현행	개선방안
분야	대상법률		
공동이용 대상정보	전자정부법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별법(주1)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 없음	개별법에도 공동이용 대상정보 규정 명시
정보공유 범위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으로 한정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
	개별법	행정기관으로 한정	공공기관까지 확대
정보공유 의무규정	전자정부법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	민원 및 행정업무 공동이용 의무규정 구체화
	개별법	없음	공동이용 의무규정 신설
정보공유 심의기능	전자정부법 등	관련규정 없음(주2)	정보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정보보호 의무규정	전자정부법	없음	정보 이용기관의 정보보호관련 규정 신설
	개별법	일부법률에만 규정	이용기관 의무규정을 모든 개별법에 규정

※ 주1) 개별법 : 주민등록법, 지적법, 자동차관리법 등 정보보유관련법률  
 주2)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정보공유 조정기능 수시 대응 곤란



## V. 향후 추진계획

### □ 행정정보공유 추진체계 강화

- 정부혁신위에 '행정정보공유조정TF'를 설치하여 점검
  - 구성 : 정부혁신위 위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 기능 : 행정정보공유 추진방향 수립, 부처간 갈등조정 및 평가
  
-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 지원기관 : 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 자치단체 등
  - 추진해야 될 사항
    - 범정부 행정정보공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행자부에서 본 개선방안을 토대로 'BPR/ISP'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주요 요약DB 연계
      - ※ 요약DB 연계를 위해 기관별로 개선해야 될 사항 조치(참고 2)
    - 정부혁신위와 협조,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 당면 추진과제

- 범정부 행정정보공유 종합계획 수립('05. 10)
-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 확대 구축('05. 8 ~ '06. 12)
-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체계 구축('06. 1 ~ '06. 12)
- 전자정부법 등 제도개혁 추진('05. 6 ~ '06. 12)

## □ 기관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

기관별	추진해야 될 사항('06.12까지)
외교통상부	여권·해외이주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토지(임야)대장·지방세납세·인감증명·지적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농림부	농지원부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보건복지부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건설교통부	건축물·자동차·토지이용계획·건축허가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법원행정처	호적·건물등기·법인등기·토지등기·법인인감정보의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국세청	국세납세·사업자등록·소득금액·납세사실·휴업사실·폐업사실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병무청	병적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 관련법령은 정부혁신위 주도로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일제정비 추진

## ◇ **쟁점 및 토의사항**

### ① **행정정보 공유범위 확대**

<b>제안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및 민간기관(금융)까지 행정정보 제공범위를 확대</li> <li>· 민원사무 이외 행정기관 일반 행정업무에도 정보 제공</li> </ul>
<b>찬성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증명서 발급 감축 및 국민편의 제고</li> <li>· 공무원 및 공공·민간기관의 업무 혁신 지원</li> </ul>
<b>반대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오·남용 확대</li> <li>· 국민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반발 확산 우려</li> </ul>

⇒ **토의사항 : 행정정보 공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

### ② **정보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b>제안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공유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li> <li>· 개별법마다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li> <li>· 전자정부법에 행정정보공유 문제를 심의할 규정 신설</li> </ul>
<b>찬성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유기관 결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좌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li> </ul>
<b>반대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등 행정정보는 공유보다 보호가 중요</li> <li>· 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유기관에서 정보제공 여부 심의 필요</li> </ul>

⇒ **토의사항 : 행정정보 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참고 1 : 행정정보 공유관련 부처별 의견

### □ 종합의견

-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 다만, 일반 업무처리용 정보제공과 민간단체정보공유, 민감한 개인정보(납세·장애인 등) 공유 등에 대해서는 반대

### □ 부처별 의견

부처별	행정정보 공유관련 의견
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공유센터 구축 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중 우려</li> <li>○ 통합DB 구축보다 기관별로 요약DB를 구축하여 연계</li> <li>○ 정보주체별 DB 통합은 찬성, 조직·업무 통합은 반대</li> </ul>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정보의 민간기관 제공은 곤란</li> <li>○ 부동산(지적, 건축, 등기) 정보 코드체계 표준화 시급</li> <li>○ 법원, 행자부, 건교부로 분산된 부동산정보 통합 필요</li> </ul>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유는 찬성, 자동차시스템 부족으로 정보제공 미흡</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 정보공유 곤란</li> </ul>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DB 구축보다 기관별로 요약DB를 구축하여 연계</li> <li>○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정보 공유는 반대</li> <li>※ 사유 : 국세부과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유지, 오·남용 우려 등</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집적에 따른 국민적 오해 우려, 법적근거 마련 필요</li> </ul>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정보 중 일반적인 정보 공유는 찬성</li> </ul>

## 참고 2 : 행정정보 공유대상 주요정보

기관별	공유대상 정보 (36종)	기관별·정보별 개선해야 될 사항			
		요약DB 구축	24시간 제공	실시간 제공	공유센터 연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	-	-	-
	토지(임야)대장정보	-	-	-	-
	지방세납세정보	-	○	-	-
	인감증명정보	○	○	○	○
	지적정보	○	○	○	○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확인정보	-	-	-	-
	건축물대장정보(일반/집합)	○	-	-	-
	사용승인서	○	-	-	-
	자동차등록원부(갑/을)정보	○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정보	○	-	-	-
	건설기계등록원부정보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	○	○	○	○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승인)정보	○	○	○	○
대법원	호적정보	○	-	-	-
	건물등기정보	○	○	-	-
	법인등기정보	○	○	-	-
	토지등기정보	○	○	-	-
	법인인감정보	○	○	○	○

기관별	공유대상 정보 (36종)	기관별·정보별 개선해야 될 사항			
		요약DB 구축	24시간 제공	실시간 제공	공유센터 연계
국세청	국세납세정보	○	○	○	-
	사업자등록정보	-	-	-	-
	소득금액정보	○	○	○	-
	납세사실정보	○	○	○	-
	휴업사실정보	-	-	-	-
	폐업사실정보	-	-	-	-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보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정보	○	○	○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정보	○	○	○	○
	취업지원대상자정보	○	○	○	○
병무청	병적정보	○	○	○	○
법무부	출입국정보	○	○	○	○
	외국인등록정보	○	○	○	○
외교통상부	여권정보	○	○	○	○
	해외이주정보	○	○	○	○
농림부	농지원부정보	○	○	○	○
광업등록소	광업원부정보	○	○	○	○

※ 자료출처 : 행자부에서 '04. 5 정보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중 선정

※ 공유대상 정보는 현재 행자부에서 수행중인 행정정보 공동 활용 BPR/ISP 후 최종 확정 예정

## ※ 참고 : 행정정보 공유 비용절감효과 산출근거

### □ 연간 정보공유 건수 및 분류

(단위 : 백만건)

기관별	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계	1,639	1,025	493	121
민원서류 감촉부분	716	102	493	121
사무처리 지원부분	923	923	-	-

※ 민원서류 감촉과 사무처리 지원부분 분류 기준

- 행정기관의 경우 총 이용건수의 10%를 민원서류 감촉부분으로 분류
- 공공·민간의 경우 대부분 관련 증명서 대신 활용하므로 민원서류로 분류

### □ 비용 절감효과 : 약 4조 6,390억원(연간)

o 민원서류 감촉을 통한 절감 비용 : 약 4조 4,450억원

= 국민 소요비용 + 공무원 민원처리비용

= [ {왕복버스비/2(버스 이용률 50%)+소요시간비용(교통+민원처리)×  
국민평균임금/시간당}×연간 처리건수 ] +

[ {민원처리시간/건당×공무원평균임금/시간당}×연간처리건수 ]

= [ {1,400원/2+(30분+5분)/60분×8,200원}×716백만건 ] +

[ {3분/60분×8,700원}×716백만건 ] = 4조 2,375억원

o 행정기관 사무처리 지원부분 : 연간 약 4,015억원

= [ {Off-line 정보조회시간(종이대장 확인시간)/건당×공무원평균임금/  
시간당}×연간처리건수 ]

= [ {3분/60분×8,700원×923백만건 } ] = 4,015억원